

대북 원유공급 차단 압박 '경제적 옥죄기' 이뤄질까

문대통령 '당근' 접고 '더 센 채찍'

'원유차단' 키 쥔 시진핑 통화 주목

탄두중량 제한 해제 군사적 응징

트럼프 통화서 "결의안에 빠져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군사적 조강수를 꺼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조치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

외노동자 송출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결의안에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극적 차원에서 아쉬움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북 경제적 봉쇄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원이 다른 대북 조치와 관련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안 추진을 뜻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가 북한에 미래의 위협이 라면 원유공급 중단은 포함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 되면 북한으로서도 당장 치명적인 상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대북 원유공급 중단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원유 공급의 최대 젖줄인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간헐적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방안에 거부감을 보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수가 임계치에 다다랐고, 중국도 북한의 핵 실험을 말려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직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전보다 강력했음에도 중국이 동참한 사례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실점에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질지가 주목되는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이나 일본 정상과 수시로 통화를 해왔지만 시 주석과는 소통하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따른 보복으로 양국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와중이라 쉽지 않은 것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현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격적인 통화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강경파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6

차 핵 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 "원유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먼트(제재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미국 시간으로 4일 아침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미국 측은 곧바로 제재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전날 전화통화에 대해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감지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오른쪽부터)와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유엔안보리(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참석 러 방문... 북 핵실험 대응 중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연세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인수·확대정상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주요협정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조치의 일환으로 원유공

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할트마긴 바트를가 몽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증진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협의한다.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ICBM 도발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조치'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또 엇갈린 안보리 해법... "초강력 제재" vs "대화해야"

미·일 "인내에 한계... 다음주 새 대북 결의안 표결 목표"

중·러 "전쟁 허용 안해... 군사해법으로 문제 해결 안돼"

미국의 노동절 휴일인 4일(현지시간)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된 위기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북한을 규탄하는 별도의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한목소리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우군' 역할을 맡아온 중국과 러시아도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 정세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노골적인 행위는 강력한 비난을 사고 있고,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례적으로 사무총장보좌를 안보리에 출석시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대북 해법에서는 또 엇갈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초강력 제

재'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론을 앞세웠다.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소위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제안은 모욕적"이라며 중국·러시아의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해법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주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다음 주 월요일(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대사는 "더 강력한 수단을 포함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결의에는 평양이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벵트 고로 일본 대사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해야 한다"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프랑스대사와 매슈 라이크로프트 영국대사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에 대해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제재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재는 건설적인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네벤자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를 하나의 대안으로 꼽기도 했다.

류 중국 대사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모든 당사자가 중국이 제기한 '동결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쌍중단 해법'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는 이른바 군사옵션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면서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며 지금도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군사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인내력이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그러자 중국의 류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군사해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오!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2)호에 따른 제품	190ml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반전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